



정쟁의 볼모로 잡힌 연합뉴스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 노동조합, 청와대·야당 상대 압박 투쟁 전개

연합뉴스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몰렸다. 연합뉴스 사장 추천 기관인 뉴스통신 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이 정치권의 정쟁 탓에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서다.

현 강기석 이사장이 이끄는 5기 진흥회는 지난 2월 7일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이 이사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6기 진흥회 출범 시기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새 사장 추천 작업도 못 하게 됐다.

이러다 보니 연합뉴스는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사원들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영진을 교체해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회사의 미래 비전을 확립해 위기를 헤쳐나갈 시급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점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내부적으로는 편집총국장 내정부터 시작되는 정기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공영언론사가 이 지경에 놓이자 우리 회사 노동조합뿐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까지 정부와 야당을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이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책임자를 이사 후보에 빨리 추천해 연합뉴스를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데 이어 14일에는 언론노조와 기자협회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우리 조합뿐 아니라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은 진흥회 출범이 늦어진 것은 정부와 야당 양측의 정쟁 탓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면서 상대방이 누구를 추천하는지 보고서야 자신의 패를 까겠다는 정치놀음에 연합뉴스라는 공영언론사가 볼모로 잡혔다는 것이다.

양측의 이런 행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야당이 추천하지 않아 진흥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야당 역시 “왜 우리가 먼저 후보를 내야 하나. 저쪽(청와대) 인사를 보고서 결정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조합은 정부가 왜 자신들의 이사 후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그래서 야당이 뭘 핑곗거리를 없앨 기회를

잡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인사를 진흥회 이사 후보로 생각하고 있기에 선뜻 공개하지 못하는지, 혹시 야당이 생각하는 카드가 과거 정권에 부역하고 노조 탄압에 앞장서 온 인사는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연합뉴스 구성원의 요구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단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사 후보를 추천해 진흥회를 출범시켜 달라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영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파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치인이나 과거 공정보도 훼손이나 노조 탄압에 앞장선 언론인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번 주를 공문이나 성명을 통해 양측에 점잖게 요구하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더욱 강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지배구조·사장추천제도 개혁에 조합원 88% 압도적 찬성

조합은 이달 12일부터 사흘간 전체 조합원 590명을 대상으로 ‘사장추천제도 개선 추진 관련 조합원 설문’을 진행했다. 참여율은 86.4%다.

조합이 연합뉴스 차기 사장을 뽑는 6기 진흥회 이사들에게 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 진흥회 3자 논의 테이블 구성 ②사장추천 절차 투명화와 시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③사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선 등 세 가지 제안을 공식 전달하기에 앞서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물은 것이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8.2%(450명)가 조합이 이상의 방안을 추진하는데 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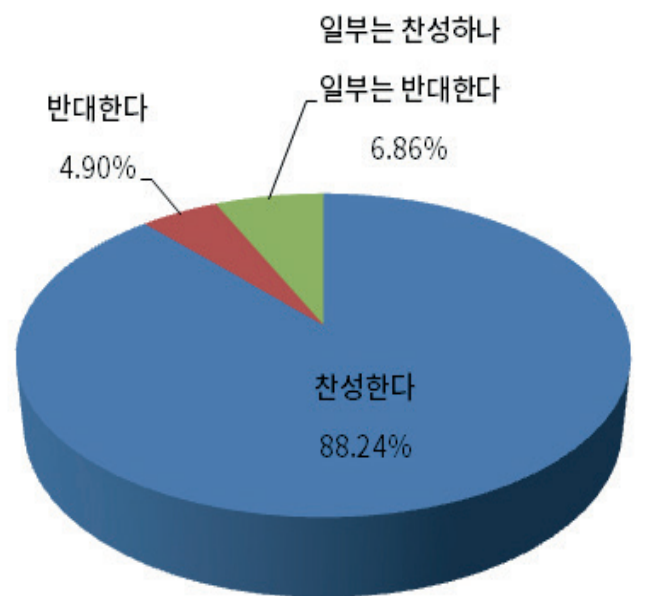
반대 의견을 낸 조합원은 25명(4.9%)이었고, ‘일부는 찬성하나 일부는 반대한다’고 밝힌 조합원은 35명(6.9%)으로 집계됐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조합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

을 보면 시민에 직접 후보를 평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진흥회의 여론 편향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특정 정파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엇갈렸다.

“작은 비율이라도 내부 구성원 참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 “연합미디어그룹의 사장을 겸하는 만큼 연합뉴스TV와 인포맥스의 의견을 두루 취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람직한 시도이지만 이번 사장 추천부터 바로 적용하다가 가뜰이나 늦어진 경영진 교체가 기약없이 밀릴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조합원도 있었다.

조합 집행부는 이번 설문을 통해 드러난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모토로 하는 공영언론에 걸맞은 보다 민주적인 사장추천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투명성 높이는 건 좋지만...시민 직접 평가는 글썄" "내부 구성원도 참여 허용돼야...중립성 보장이 관건"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이달 12~14일 진행한 설문에서는 미리 정해진 선택지 외에도 7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다음은 조합에 접수된 의견. (※중복되거나 민망한 내용 제외)

- 시민들이 후보자를 직접 평가하려면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특정 정파 지지자들의 비정상적 행태를 볼 때 '시민'에 너무 큰 투표권을 주는 것도 부적합하다.
- 시민이 후보자를 직접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것에 반대한다. 포퓰리스트가 등장해 사내 갈등 구조가 더 악화할 수 있다.
- 사추위 내 진흥회 지분 문제와 함께 각 주체 추천이 늦어질 경우 대안이 담겼으면 한다.
- 작은 비율이라도 내부 구성원이 (사장 추천과정에) 참여했으면 한다. 직접 투표 방식을 할 수도 있고 대의원 투표도 가능하다고 본다. 연합 미디어 그룹의 사장을 겸하는 만큼 내·외부 인사 참여 시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인포맥스의 의견을 두루 취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진흥회 및 사장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회사 경쟁력에 큰 마이너스다.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직전 사장 선임시 유튜브로 정견 발표를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으나, 이후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모든 과정을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 사추위 개선도 의미가 있지만, 정권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현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 사추위 내 진흥회 지분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 늘린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 사원에 의한 직접투표로 사장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 경영전문가를 원한다.
- 좋은 방안이나 이번부터 적용하려다가 사장 선임이 한없이 밀릴까 걱정이다.
- 중립적이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릴 때 직군별, 업종별 대표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 외부인이 원하는 사장보다 조합원이 원하는 사장을 뽑아야 한다.
- 시민 몫 외부인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보장이 없다. 진흥회 이사진 위주인 사장 추천위에선 언론노조나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목소리만 커져 더욱 편파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 이번처럼 진흥회 이사 선임이 늦어져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 사장뿐 아니라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자질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위해 노·사·진흥회 3자 틀을 제안했는데 사측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경영진 중 차기 경영진을 노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기자회견 연합뉴스지회가 들어가는 게 맞다. 시민 참여는 바람직하나 시민이 정부의 2중대 역할을 하는 특정 단체가 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만 번지르르한 개악이 될 수 있다.
- 사장 지원자들에게 지배구조개선 추진 방안과 편집권 독립 시행 방안을 경영계획서 또는 공개정책설명회 내용에 명시하도록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바란다.
- 노조 집행부 임기 후반부에 사장 선임을 목전에 두고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차기 사장 선임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 선발 과정을 중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유했으면 한다.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해주세요.
- 사장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찬성하나 시민의 직접 평가는 반대한다. 대신 연합 호의 선장을 뽑는 만큼 선원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직접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조합, '사장추천제도 민주화·지배구조 개선' 공식 제안키로

6기 진흥회 출범 직후 전달 예정

12~14일 진행한 설문에서 조합원 대다수가 사장추천제도 개선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조합은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차기 이사진에 '사장 추천 절차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3대 제안'을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시기는 6기 진흥회 이사회가 출범한 당일이 될 전망이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한 빨리 연합뉴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진흥회 3자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뉴스통신진흥회법과 진흥회 정관 개정 등 개혁 방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밀실 추천' 비판을 받아온 연합뉴스 사장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후보자를 직접 평가해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류심사 평가 기준을 사전에 밝히고, 공개정책설명회 시민 참관단을 '시민평가단'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다수 공영언론이 비슷한 제도를 사장 선임 절차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KBS 이사회의 경우 2018년 2월 양승동 현 사장을 추천할 때 여야 동물로 사장 후보자 선정 절차 소위원회를 만들고 142명 규모의 시민자문단을 구성

해 시민자문단 의견 40%, 이사회(11명) 의견 60%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작년 2월 박성제 사장 추천 당시 120명으로 시민평가단을 꾸려 정책설명회를 참관하게 했고, 예비후보 3명 중 1명을 떨어뜨릴 권한을 시민평가단에 부여했다.

다만, 진흥회는 이사 7명 중 6명이 친여권 인사로 채워질 수 있을 만큼 KBS 이사회나 방문진에 비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평가단 모집을 위한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활동 관리를 중립적인 외부 학술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장 후보 추천 업무를 주관하는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위원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존 사추위는 진흥회 이사 3명과 진흥회·조합 공동추천 외부인사 1명이 전체 정원의 70~80%를 차지함으로써 '옥상옥' 비판을 받는 기형적 구조였다. 조합은 사추위내 진흥회 지분을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중립적이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외부인

사의 참여를 그만큼 늘릴 것을 요구한다. 사추위에 진흥회 이사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대신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중립적 외부인사를 사추위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심사를 진행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합뉴스 구성원은 그동안 "연합뉴스 사장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정한다"고 자조해왔다. 사장을 뽑는 진흥회 이사 7명 중 5~6명을 여권이 독식하도록 해 놓은 뉴스통신진흥회법의 문제가 크다.

6기 진흥회 출범 지연으로 연합뉴스에 리더십 공백이 초래된 이번 사태도 공영언론 감독 기관의 이사 자리가 여야 정치권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여야가 정보 주권 수호와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진흥회 이사로 누구를 언제 앉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따진 결과가 현재 연합뉴스가 직면한 비정상적 혼란이다.

이런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조합은 진흥회를 상대로 이상의 3가지 제안을 관철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타 공영언론사, 언론노조 등과 연대해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